

한국오리협회 전국 도지회 오리데이(52데이) 맞이 행사

5월2일 오리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오리데이 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오리데이는 오리고기 소비를 홍보하고 오리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5월 2일로 지정된 날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오리데이를 기념해 매년 오리고기 할인 이벤트, 무료 시식회, 오리고기 나눔행사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지회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에서는 5일장, 지역 축제 등에서 관내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무료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부분 완화된 가운데 봄 날씨와 함께 나들이 나온 많은 관광객과 관내 주민들에 오리고기를 알릴 기회였다.

함평



함평군지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전라남도 대표 지역축제인 '2022 함평 니비축제'에서 4월 29일부터 5월 8일 축제 동안 오리고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영암



나주



영암군지부는 시중 오일장과 월출산기찬랜드에서 관내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무료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

담양



담양군지부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일대 5일장 현장과 대나무 명소 담양 죽녹원에서 오리고기 시식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국내산 오리고기를 맛볼 기회를 제공했다.



충북도지회

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음성군지부와 진천군지부는 5월 2일 오리데이를 맞아 관내 학생 약 1만3천여 명을 초청했다. 협회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대한민국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충북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오리고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도지회

한국오리협회 경기도지회는 5월 2일 포천 오리킹 오리요리 음식점에서 경기도청 동물방역과 직원 약 15명, 경기도지회 회원 약 20명을 초청해 오리데이 기념 소비촉진 리플렛 및 홍보 물 배부하고 경기도청 방역담당 공무원간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북 부안군지부

화재 오리 농가 찾아 자원봉사 활동 펼쳐

부안군 오리협회(지부장 김성태), 한국부인회 부안군지회(회장 강명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출포를 지역구로 둔 김정기 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4월 19일 출포 오리농장 화재현장을 찾아 연합자원봉사활동을 했다.

16일 화재로 인해 농장 내 대부분 축사는 큰 피해를 받았고, 당장 화재 잔해들의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러 단체 및 회원들은 농장주를 대신해 화재현장에서 1만7000여 마리의 오리를 다른 농장으로 이동시키는 현장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피해 농장주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부안군 오리협회 김성태 지부장은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피해를 입은 농장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독립신문〉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 참여

역대 최고 수준 FTA…농어민은 벼랑끝 후쿠시마산 수입도 가능…국민도 위협

협회는 지난 4월 13일 열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에 참여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에 힘을 보탰다.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육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

